

국회의장 찾은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결단해달라”

원내대표단-김진표 의장 면담...24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민주 “강제수사와 양자택일 아냐”...정의 “정쟁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했다.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서 처리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특수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국정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국정조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야 3당은 끝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4일 계획서 처리를 위해 특위 구성에 나서 달라고 김 의장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라며 “의장님도 설득에 나서 주시고,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니 정쟁으로 비치는 것이지, 협의 테이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정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의장께서도 여야간 중재자의 역할도 충분히 하셔야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 역시 “의장께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주시고,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결단해달라”고 부탁했다.

30여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 의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도 절차상 이번 주 중에 명단이 제출돼야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며 “우선 야 3당은 제출된 요구서에 기반해 계획서 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으나, 늦어도 주말까지는 명단을 제출해야 월요일부터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 물리적 시한은 이번 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이날 회동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 ‘민영화 방지·언론독립 보장법’ 당론 채택

정책의총...주요 법안 50개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영화 방지법, 법외국외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올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이 소개한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민영화 방지법은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외국외도입법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역시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표적 감사 방지법’(감사원법)과 함께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맞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신문 편집위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공약가 예우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도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도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 의아저씨법), 은행권리 폭리 방지법, 불법사채 무

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은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를 ‘노동손해소송 비용 제한법’이라고 지칭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들 중에도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고, 입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여야 찾아 현안 해결 총력

지도부 면담...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 등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해상풍력 확대 보급을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로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 요청했다. 김 지사는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 무역장벽으로 등장해 재생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발전량은 부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은 개별입지에 따른 주민협의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간 레이저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나, 우리나라는 레이저 관련 핵심 부품, 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과학기술 국가 상위계획에 레이저 기술 반영이 시급하다”며 “2023년 1분기에 후보 부지를 신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 특화단지인 광주·전남에 조성되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으고, 반도체 인력 양성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등과 관련 3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 반영,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여수·광양 수송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광양항~울진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도(항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아산전진진단기 구축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글로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 주요 현안도 언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국회서 논의”

국민의힘 광주시당 정책 간담회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5일 국회에서 국립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건립 사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완중 정책위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 차은선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 전남, 제주 등 174

개 유관기관 지역민들이 건립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제주 정서 행동장애 청소년이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신적 치유·치료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완중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해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간담회를 주선한 김정현 시당위원장은 “국립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건립되면 광주, 전남, 제주지역 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와 보호·자립 등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이르면 이달내 민주 복당

국정원장 퇴임 후 활발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르면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 도당과 목포 지역위원회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보내오면 오는 22일 중앙당 자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일단, 민주당 전남도당과 목포지역위원회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원장이 외부에서 정부 비판 등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복당 찬성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